

Vol. 47

주간 농업농촌동향

2016. 11. 21.

■ 정책동향

2016년산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개시 등

■ 해외단신 & 국내단신

세계 산림 현황 등

■ 연구지원

2016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등

■ 현안분석

농업 부문 R&D 동향



미래정책연구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2016년산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개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17.)

- [농식품부, 2016년산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개시, 11.17.]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확정하고, 2016년도 직불금을 11월 17일부터 해당 시·군·구 통해 지급
 - ※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농지를 소유 혹은 입차한 농업인 중 법에서 정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 자에게 지급
 - (지급*) △대상자수···794천 명(2015 총 농가수 1,089천호 중 72.9%), △대상면적···837천ha(2015 논 면적 908천ha 대비 92.2%), △지급금액···8,383억 원(ha당 100만 원)
 - ※ 2015년 지급실적: 779천 명, 844천ha, 8,422억 원
 - (감소 원인) △대상자수···귀농인 등 신규진입 농업인의 조건 완화, △대상면적···부적격 판정된 농지(폐경지, 잡초 미제거 등)와 타용도로 전용된 농지가 반영

2016년산 쌀 초과공급 물량 전량(29.9만 톤) 격리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14.)

- [농식품부, 2016년산 쌀 초과공급 물량 전량(29.9만 톤) 격리, 11.15.] 금년 쌀 생산량(419.7만 톤) 발표에 따른 추가격리 조치 시행, 우선 격리 발표한 25만 톤(10.18.)에 4.9만 톤 추가 격리 결정
 - 시장에서 쌀 물량 부족에 따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시장격리 물량을 밥쌀용으로 시장 방출 자제

2017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중 다수확품종 제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14.)

- [농식품부,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품종에서 황금누리, 호품 제외, 11.14.] 공공비축미곡의 품질향상 및 쌀 적정생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다수확 품종 2개(황금누리: 단수 574kg/10a, 호품: 600kg/10a) 제외하기로 결정*
 - ※ 단위면적당 수확량, 소비자 선호도, 지자체 기 선정품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
 - (향후 계획) 2018년에는 제한품종 확대하고, 매입 품종 수를 1개로 축소, 정부며 보급중도 시장선호도가 낮은 다수확 품종은 제외할 방침

대중국 B2B 모바일웹 「한식식품(韓新食品)」 개통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15.)

- [농식품부, 바이어매칭 모바일웹 「한식식품(韓新食品, www.hanshi.at.or.kr)*」 개통, 11.15.] **△신상품 소개**…중국 수입바이어, 유통매장 및 온라인 MD를 대상으로 신규 및 유망 한국식품에 대한 실시간 상품정보 제공, **△판로개척**…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기업 지원, **△수출증대**…모바일웹을 통한 바이어매칭으로 신상품 수출거래 증가 도모
 - ※ 한국의 신규상품을 의미하며, 웹페이지, 상품정보 등 전체를 중문으로 구성하여 중국 바이어의 사용편의성을 제고하였고, 실시간 채팅 및 푸쉬 기능을 탑재, 중국바이어와 수출업체가 실시간으로 문의와 답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IT기반 농업농촌 비즈니스 확대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17.)

- [농식품부-카카오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11.17.] IT 기반 농업·농촌 비즈니스 확대 협력을 통한 농식품 **新유통경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실현 상생협력 모델** 구축
 - (협약 내용) △온라인 로컬푸드 직거래 운영모델 구축, 카카오 역량을 활용한 농식품 판로확대 지원 및 홍보 협력, △기타 IT기반 농업·농촌 관련 비즈니스 협력 확대
 - (주요 협력 사항) △쌀 등 우수 농산물과 중소기업 농식품에 대한 다양한 판로확대 지원, △쌀 소비 활성화를 공동 캠페인 및 농식품 소비 공동 마케팅

불법불량 먹거리 수입유통에 대한 정보교환 및 단속 협력

자료 : 관세청(2016.11.16.)

- [관세청, ‘2016년 제2차 농수산물 정보공유 협의체* 회의’ 개최, 11.16.] 불법·불량 먹거리 수입·유통에 대한 정보교환 및 단속 협력키로
 - ※ 해외 농수산물 밀수, 저가 수입, 원산지세탁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농어가를 보호하고, 불량 농수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민간 협력체
 - ※ (구성) 관세청, aT, 한국수산물무역협회, 한국마늘산업연합회, 한국국산콩생산지협회, 생강전국생산자협의회, 한국고추산업연합회, 한국절화협회, 양만수산업협동조합, 인제응대항태연협회
 - (주요 내용) △aT, 한국수산물무역협회, 생산자 단체 등…품목별 시장동향, 국내외 가격, 밀수입 등 정보와 애로사항, △관세청…불법 수입 농수산물 단속 활동과 앞으로의 단속 방향 등을 설명

농식품부, 미 신행정부 출범 관련 모니터링 강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17.)

- [농식품부, 미 신행정부 출범 관련 모니터링 강화, 11.17.]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자국 이익주의 등 정치적 수사를 주로 구사하여 **대의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향후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전반적인 모니터링 강화** 추진
 -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아직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 요구, 질의는 없는 상황이며, 불필요한 불안감 조기 차단하고 차분한 대응 견지
 - (미 신행정부 출범 관련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IF 구성) 수출입 동향, 미국 인수위 활동, 특이 사항 등을 수시 점검, 미 신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선제적 대응*
 - ※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 있는 통상 현안 사전 점검, 국내 농식품 분야에 미칠 영향 등 분석
 - (대응 방안) 미 신정부 인수위 출범, 정책 기조 발표, 주요 장관 임명 등 **주요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따라 시나리오별 세부 대응 방안 마련**, 농업인 단체, 통상 전문가들과의 포럼 등을 통해 **미 신정부 출범 관련 동향을 적극 공유**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국민 소통 강화** 추진

민관합동 대미(對美) 통상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운영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6.11.13.)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역관련 실국장 회의 개최, 11.13.] 미국 트럼프 후보 당선 이후의 **통상환경 변화와 보호무역 강화 우려**에 대해 신속·능동적인 대응 방안으로 민관합동으로 ‘**대미(對美) 통상협의회(공동위원장: 산업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 및 ‘**대미(對美)통상 실무작업반(반장: 산업부 2차관)**’ 구성·운영
 - (대미 통상협의회*) △대미 통상대책 및 협력방안 수립, △아웃리치 전략 마련, △대미 민관협력 추진
 - ※ (구성) 현행 통상산업포럼 산하 對美통상 분과회의를 확대 개편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무역협회 회장의 공동 주관 하에 주요 對美수출업종별 협회, 무역 지원기관, 주요 연구기관 및 對美 통상전문가로 구성
 - (대미 통상 실무작업반*) △시나리오별 세부대책 마련, △아웃리치 현황 점검, △업종별 협력방안 제시
 - ※ (구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유관부처, 경제단체, KOTRA·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민·관 연구기관(LG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美 통상 전문가 / (간사) 통상 정책국장 / (운영) 매주 정기회의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정책동향

2016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16.11.17.)

- [황교안 국무총리, APEC 리마 정상회의 참석, 11.19.~20., 페루] 세계 경제의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안보 문제 등 대응방안 논의, 페루 신정부와의 인프라·방산·에너지·보건의료 등 실질협력 지속 발전 및 북핵 공조 기반 강화
 - (주요 내용) △구조개혁과 혁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 등 제안하는 한편, △우리의 스마트팜(Smart Farm) 등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과 지역맞춤식 농촌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역대 연계성 및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 강조

농식품 수출업체 FTA 특혜 관세 활용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16.)

- [농식품부, 관계부처·관세법인 등과 협업*으로 수출업체 상대 권역별 설명회 개최**] 타 분야(제조업 평균 70%)에 비해 원산지 증명이 어려워 FTA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23%) 농업 분야의 FTA 활용도 제고 목적으로 전국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관세법인 등
 - ※※ (11.16) 서울·인천·경기권역, (11.23) 충북·대전·충남, (11.29) 전북, (12.6) 광주·전남, (12.7) 부산·울산·경남, (12.13) 대구·경북, (12.14) 강원
- (주요 내용) ① 정부의 수출 확대 정책 및 FTA 활용 관련 지원 정책 현황, ② 농산물 수출 FTA 활용 방법, ③ 각종 비관세 장벽 및 검역 제도, ④ 농업분야 FTA 국내 보완 대책 및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관련 설명 등

고병원성 AI 진행상황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16.)

- [전북 익산 만경강, 11.10일 포획한 야생철새 고병원성 A(H5N6) 검출, 11.16] 검출된 지점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이동제한 조치
- [전남 해남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 고병원성 AI 의심축 신고, 11.16] 바이러스 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 중, 이동통제 실시
- [2016년 구제역 가상방역 도상훈련 실시, 11.16]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활용하여 실제 발생을 가상한 상황을 부여하고, 상황별 지자체·유관기관 등의 초동방역 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 정책동향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종합대책 마련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환경부·국토부(2016.11.14.)

□ 개요

- [총리 주재,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개최, 11.14] 「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논의·확정
 - (추진이유)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계 물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한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
 - ※ 세계 물시장: 7천억 달러 규모(800조 원, 2016), 연평균 2.98% 증가 전망(2013~2020)
 - ※※ 물기업 수출참여율(4.5%): 국내 제조업 평균 대비 1/4에 불과
 - (주요전략)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 △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종합대책 마련
 - ※ 목표(2015 → 2030): 매출액(31.4조 원 → 50) / 수출액 비중(4.1% → 20) / 일자리 창출(12.4만 명 → 20)
 - (기대효과) △환경·대체수자원 확보, △경제·수출액 확대, △고용·일자리 창출
 - ※ 신규 일자리(7만개) 창출, 청년층 선호 유망직종 창출

□ 육성 전략

-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장애요인을 극복할 원스톱 지원 체계(Bridge Program) 구축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시장지향형 R&D 추진 및 맞춤형 실증인프라로 신속한 인·검증
 - 우수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및 수요 창출
 - 현지맞춤형 지원 및 동반진출 활성화로 해외진출 촉진
- 내수시장 활성화(REwater Project)를 통해 국내실적 확보, 강소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촉진
 - 지속가능한 물이용 원칙을 정립하여 재이용률 제고(2015년 6.4% → 2030년 34%)
 - 노후 상·하수도를 ICT가 융합된 스마트인프라로 혁신(2017~2030년, 9.4조 원)
 - 연안·도서 지역의 해수담수화 확대, 물-에너지 최적연계 모델 개발
- 물산업 진흥 근거법령 및 전담기관 등 물산업 육성정책의 강력한 추진기반 및 체계 마련

해외단신 세계 산림 현황

□ 세계 산림 현황

- [대상국가] 세계
- [자료출처] FAO, 'State of the World Forests 2016', 2016.7.18.
- 2015년 세계 산림면적은 약 40억ha로 1990년 대비 1억2,900만ha(3.1%) 감소, 산림 손실 방지는 임산물과 환경서비스에 생계를 의존하는 세계 최빈층을 포함한 수백만 인구에게 중요,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서식지를 보호하며, 생태계 복원력을 유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지원
- 지난 25년간 산림손실의 대부분은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열대기후 지역에서 발생, 반면 농촌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는 온대기후에서는 순산림면적 증가
- [농업을 위한 산림 전용은 산림황폐화의 주요 원인] 2000-2010년 기간 열대지역* 산림면적 감소(연평균 700만ha)는 농업면적 증가(연평균 600만ha)와 비슷한 수준, 주로 남아메리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발생
 - ※ 열대·아열대지역의 산림손실 면적의 40%는 대규모 상업 농업, 33%는 영세농업, 27%는 인프라·광업 등이 차지
- [상업 농업*] 수출 집중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지만, 현지 식량 공급에 대한 기여 수준은 미미, 부정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규제 변화와 적절한 사회·환경적 안전장치가 필요
 - ※ 중앙아메리카 산림손실 면적의 약 70% 차지, 아마존 지역에서 가축 목장 경영, 대두 재배, 기름야자 조립은 1990년 이후 산림황폐화를 주도한 주요 요인
- [영세 농업] 아프리카의 수많은 빈곤가구의 생계에 중요하며, 농민단체 강화 등 영세 농업 효율성 개선 기회는 보다 광범위한 농촌개발 및 사회보호 사업과 병행될 필요
- [산림 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 증가, 농업개발, 토지 소유권, 토지이용 변경 관련 거버넌스 포함, 특정 요인의 영향력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상이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산림은 물 순환, 토양 보호, 탄소 격리, 수분매개체(pollinator) 등의 서식지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달성에 핵심적
- [식량안보] 산림면적 감소를 통한 농업면적 확대가 아닌 집약적 농업과 사회 보호 등의 조치를 통해 달성 가능
- [정책 권고] 산림·농업·식품·토지이용·농촌개발 분야 간 정책들의 조정 개선이 필요하며, 토지이용 변화를 주관하는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역시 중요

국내단신 국내 산림 현황

□ 국내 산림 현황

- [대상국가] 한국
- [자료출처] 산림청, 2015 산림기본통계 등
- [산림면적] 2015년 말 기준 6,335천ha(산림비율 63.2%), 2010년 말(6,369천ha) 대비 34,228ha(0.54%) 감소*
 - ※ 산림이 도로신설 및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 타용도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2010년부터 5년간 연평균 약 6,846ha(여의도면적 약 24배)씩 산림 감소
 - (산림비율* 63.2%) OECD국가 중 핀란드(73.1%), 일본(68.5%), 스웨덴(68.4%)에 이어 4위, 세계 평균(30%)의 2배
 - ※ 국토면적과 대비한 산림면적 비율(산림률)은 강원도가 81.5%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70.3%,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광역시 64.7%로 우리나라 산림률(63.2%)을 약간 상회, 산림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전체면적의 약 25.6%가 산림
- [입목축적] 2015년 말 기준 924,810천㎥*(146.0㎥/ha), 2010년 말 800백만㎥에 비해 125백만㎥(15.6%) 증가(연 평균 3.1% ↑)
 - ※ 식목일 제정원년인 1946년 56.4백만㎥에 대비 16.4배 ↑, 치산녹화 원년인 1973년 74.5백만㎥에 대비 12.4배 ↑
 - (입목축적이 급증한 원인) 제1·2차(1962~1972) 경제개발계획기간 중 산림녹화 사업 및 제1·2차(1973~1987) 치산녹화사업을 통해 조림한 나무(95억 본)들이 31~50년생인 장령림에 도달, 1998년부터 산림청에서 시행한 숲가꾸기 등의 산림 자원관리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추정
 - (ha당 입목축적) 146㎥로 2010년 5.6㎥ 대비 20.4㎥(16.2%) 증가
 - ※ OECD 평균 131㎥ 및 미국(131㎥), 캐나다(136㎥) 추월(순위로는 21위)
-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 이 진행 중이며, 장기간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27)' 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때까지 향후 2년간 '산림미래플랫폼' 운영(2016.3.30.)
 - ※ 국내외 여건변화와 사업목표 조기 달성 등의 사유로 2012년 상반기부터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 변경 추진해 2013년 7월 확정 고시하여, 2017년까지 산림가치 200조 원, ha당 입목축적(나무량) 150, 목재자금률 21% 달성한다는 계획
- 산림청은 2016년 6대 중점과제로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관리, 2. 친환경산림 산업 활성화, 3.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4.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5.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생태계보전, 6. 국제 산림협력 확대 및 신기후체제 대응 추진

연구지원 2016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16.11.15.)

□ 주요 내용

- [2016년 쌀 생산량] 4,197천 톤, 전년 대비 3.0%↓
 ※ (2015) 4,327천 톤 → (2016) 4,197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2015) 4,210천 톤 → (2016) 4,084
 - (감소 원인) 재배면적 감소(2.6%↓), 10a당 생산량 감소(0.6%↓)로 전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만 톤(3.0%↓) 감소
- [재배면적] 778,734ha, 전년 대비 2.6%↓
 ※ (2015) 799,344ha → (2016) 778,734
 - (감소 원인) 건물건축, 택지개발, 타작물 재배 전환 등으로 감소
- [10a당 예상생산량(현백률 92.9%)] 539kg, 전년 대비 0.6%↓
 ※ (2015) 542kg → (2016) 539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2015) 527kg → (2016) 525
 - (감소 원인)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의 기상여건 호조로 낱알 수가 증가하였으나, 낱알이 익는 시기(등숙기)의 일교차 감소, 잦은 강우 등 후기 기상여건 악화

■ 쌀 생산량 및 벼 재배면적 현황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 대비(%)
총 생산량(만톤)	422	401	423	424	433	420	-3.0
10a당 생산량(kg)	496	473	508	520	542	539	-0.6
재배면적(천ha)	854	849	833	816	799	779	-2.6

※ 현백률 92.9% 기준이며, 10a당 생산량은 논벼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

- [연도별 추이] 최근 3년간(2013~2015) 기상호조로 10a당 생산량 증가율이 재배면적 감소율보다 커 총생산량은 점차 증가하였으나, 올해는 재배면적 감소율이 커 총생산량은 감소세로 전환
- [시·도별 생산량] 전남(846천 톤) > 충남(774) > 전북(687) 순

FAO 식량가격지수 (2010년~2016년 10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11.14.)

연도	식량가격지수	육류	유제품	곡물	유지류	설탕	
2010	188.0	158.3	206.6	179.2	197.4	302.0	
2011	229.9	183.3	229.5	240.9	254.5	368.9	
2012	213.3	182.0	193.6	236.1	223.9	305.7	
2013	209.8	184.1	242.7	219.3	193.0	251.0	
2014	1월	203.2	182.2	267.7	191.4	188.6	221.7
	2월	208.6	181.8	275.4	198.6	197.8	235.4
	3월	213.8	185.5	268.5	208.9	204.8	254.0
	4월	211.5	190.4	251.5	209.2	199.0	249.9
	5월	210.4	194.6	238.9	207.0	195.3	259.3
	6월	208.9	202.8	236.5	196.1	188.8	258.0
	7월	204.3	205.9	226.1	185.2	181.1	259.1
	8월	198.3	212.0	200.8	182.5	166.6	244.3
	9월	192.7	211.0	187.8	178.2	162.0	228.1
	10월	192.7	210.2	184.3	178.3	163.7	237.6
	11월	191.3	206.4	178.1	183.2	164.9	229.7
	12월	185.8	196.4	174.0	183.9	160.7	217.5
(평균)	201.8	198.3	224.1	191.9	181.1	241.2	
2015	1월	178.9	183.5	173.8	177.4	156.0	217.7
	2월	175.8	176.9	181.8	171.7	156.6	207.1
	3월	171.5	170.4	184.9	169.8	151.7	187.9
	4월	168.4	170.8	172.4	167.2	150.2	185.5
	5월	167.2	172.6	167.5	160.8	154.1	189.3
	6월	164.9	169.5	160.5	163.2	156.2	176.8
	7월	164.2	172.7	149.1	166.5	147.6	181.2
	8월	155.0	170.8	135.5	155.1	134.9	163.2
	9월	155.3	167.6	142.3	154.8	134.2	168.4
	10월	158.2	158.0	155.6	157.3	142.6	197.4
	11월	155.2	154.6	151.1	153.6	138.2	206.5
	12월	153.4	150.0	149.5	151.6	141.5	207.8
(평균)	164.0	168.1	160.3	162.4	147.0	190.7	
2016	1월	149.3	145.2	145.1	149.1	139.1	199.4
	2월	149.7	146.7	142.0	148.2	150.3	187.1
	3월	150.8	145.8	130.3	147.6	159.8	219.1
	4월	152.8	149.6	127.4	149.8	166.4	215.3
	5월	156.7	154.4	128.0	152.5	163.3	240.4
	6월	163.9	159.9	137.9	156.9	161.9	276.0
	7월	162.5	161.7	142.3	148.1	157.3	278.7
	8월	166.6	164.9	154.6	143.6	169.0	285.6
	9월	171.4	165.0	176.0	140.9	172.0	304.8
	10월	172.6	163.4	182.8	142.3	167.9	315.3
(평균)	159.6	155.7	146.6	147.9	160.7	252.2	

WTO 등,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발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6.11.14.)

□ 개요

-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발표, 11.14.] 금년 하반기 G20 국가들이 신규 도입한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전년 동기와 유사**하며, 주로 **반덤핑 등 수입 규제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
 - ※ (조사기간) 2016.5월 중순~10월 중순, 5개월간, (조사주체) WTO·OECD·UNCTAD 사무국 공동 작성, (조사 대상국) G20 회원국, (조사 발간 회수)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주요 내용

<무역 및 무역관련 조치>

- [무역제한] G20 회원국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는 2016년 상반기 급증하였으나 **금번 조사기간**에는 이전해인 **2015년과 유사한 수준**** 유지
 - ※ △무역구제(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관세인상, 수입할당 등), △수출제한(수출세 부과, 수출금지 등), △기타(국내부품사용요건 등)로 구성
 - ※※ (2014.10~2015.5월) 17.0건 → (2015.5~10월) 17.2 → (2015.10~2016.5월) 20.7 → (2016.5~10월) 17.2
- 세부적으로 **수입제한조치**(5.4건 → 3.0) 감소세이고, **무역구제조치**(12.7건 → 12.2)와 **수출제한조치**(1.1건 → 1.0)는 **이전과 유사 수준**
- 그러나, 전체 무역제한조치에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여전히 **무역구제조치**를 **중심으로** 각국의 **보호주의가 실시**되고 있다고 평가
 - ※ (2014.10~2015.5월) 60% → (2015.5~10월) 56 → (2015.10~2016.5월) 61 → (2016.5~10월) 72
- [무역원활화] 금번 조사기간 중 **신규 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 또한 **직전 조사기간 대비 다소 감소**(월평균 14.3건 → 13.2)
 - ※ △무역구제(반덤핑 조사철회, 반덤핑 관세 적용중단 등), △수입원활화(수입관세 철폐, 일시적 감축, 통관절차 간소화 등), △수출원활화(관세인하 또는 수량제한 철폐 등)
- 세부적으로 **무역구제조치 철회** 등(6.0건 → 7.2)이 **증가**하였으나 **수입원활화조치** (6.4건 → 5.2) 및 **수출원활화조치**(1.6건 → 0.8)는 **감소**

Ⅰ G20 국가들의 기간별 무역조치 신규도입 현황(단위: 건수) Ⅰ

조사기간	2012.10월중 -2013.5월중 (7개월)	2013.5월중 -11월중 (6개월)	2013.11월중 -2014.5월중 (6개월)	2014.5월중 -10월중 (5개월)	2014.10월중 -2015.5월중 (7개월)	2015.5월중- 10월중 (5개월)	2015.10월중 -2016.5월중 (7개월)	2016.5월중- 10월중 (5개월)
무역제한조치								
무역구제	67	70	66	54	71	48	89	61
수입제한	29	36	25	25	32	26	38	15
수출제한	7	8	17	9	10	11	8	5
기타	6	2	4	5	6	1	10	4
합계	109	116	112	93	119	86	145	86
월평균	15.6	19.3	18.7	18.6	17.0	17.2	20.7	17.0
무역원활화조치								
무역구제	36	37	55	39	56	31	42	36
수입원활	30	20	35	35	45	25	45	26
수출원활	4	1	2	5	8	6	11	4
기타	0	0	1	0	3	0	2	0
합계	70	58	93	79	112	62	100	66
월평균	10.0	9.7	15.5	15.8	16.0	12.4	14.3	13.2

<투자 및 투자 관련 조치>

- 2016년 상반기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이전 기간인 2015년 하반기 대비 5% 감소**
- 일부 G20 국가들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 도입
 - (중 국) 투자원활화 차원에서 외자기업법 등을 개정하여, 외투기업의 설립·변경 중 상무부 등의 허가 대상 범위 축소
 - (사우디) 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75% → 100%로 확대
- G20 회원국들은 4건의 양자투자협정과 1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인도네시아는 1건(싱가포르)의 양자투자협정 종료 통보
 - ※ 2016.10.14. 기준 G20 국가의 양자투자협정은 2,958건, 기타 국제투자협정은 363건

<평가>

- G20의 **월평균 무역제한조치 신규 도입은 직전 기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08년 이후 무역제한조치 총수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
 - ※ 2008.10월 이후 취해진 무역제한조치의 누계건수는 총 1,671건이며, 이 중 2016.10월 중순 기준으로 1,263건 잔존(이전 기간 1,196건 대비 5.6%↑)
-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에 대해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단호히 대처**하고,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수입규제협의회 등 **각종 민관 채널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 집중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우리나라 관련 내용

<"G20 무역 및 투자 조치 제16차 보고서" 조치별 상세내용: WTO는 본문의 전체 조사와는 별도의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개별 조치별 상세분석 제공>

- [반덤핑 조치: 동향] 2016.1~6월간 G20 회원국들은 108건*의 철강 등** 대상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여 이전 기간(2015.7~12월) 96건 대비 12건 증가
 - ※ 인도(48건) > 미국(24) > 호주(11) > 아르헨티나(6) > EU(5) > 브라질·터키(4) 순
 - ※※ 철강·금속(38%) > 화학(18) > 섬유(11) > 플라스틱(10) > 광물(7) 순
- (한국) 1건의 신규 조사(중국)를 개시하였으며, 인도·미국(각 2건), 캐나다·중국·인니·터키(각 1건)으로부터 조사 대상이 됨
- [상계관세: 동향] 2016.1~6월간 G20 회원국들은 19건*의 철강 등** 대상 신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여 이전 기간(2015.7~12월) 16건 대비 3건 증가
 - ※ 미국(12건) > 호주(3건) > 캐나다·중국·EU·인도(1건) 순
 - ※※ 철강·금속(42%) > 플라스틱(21) > 화학(11) > 종이(11) 순
-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 동향] SPS 협정상 통보의무에 따라 2016.5.1~9.30.간 G20 회원국이 SPS 위원회에 통보한 조치*는 270건이며, 브라질과 캐나다가 20% 차지
 - ※ 통보 내용은 식품 첨가물, 잔류허용기준(MRL) 등 식품안전 관련이 대부분(74%)
- [무역 관련 무역기술장벽(TBT) 조치: 동향] TBT 협정상 통보의무에 따라 2016.5.1~9.30.간 TBT 위원회에 통보한 조치의 대부분은 미국 등 G20에 속한 5개국*이 차지
 - ※ 미국(86건) > 사우디아라비아(38) > EU(34) > 한국(28) > 러시아(26) 순

2016년 사회조사 결과 (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자료 : 통계청(2016.11.15.)

<가족>

- [부모동거자]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의 비율은 29.2%로 감소 추세이고, 부모님만 따로 사는 경우는 계속 증가하여 68.2%
- [부모생활비] 부모의 생활비를 '부모 스스로 해결' 하려는 비율은 52.6%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
- [부모부양관계] '가족과 정부·사회' 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45.5%로 가장 많아
- [가사분담]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48.1%,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부담하는 남편은 17.8%

<교육>

- [학교생활만족도] 학생의 52.3%는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만족
- [기대교육수준] 학생과 부모 모두 기대하는 교육 수준은 '대학교(4년제 이상)' 가 학생 64.7%, 부모 72.8%로 가장 많아
- [대학생등록금마련방법] 대학생의 절반 이상(58.0%)은 '부모님(가족)의 도움'
- [전공과직업의일치도] 대학원 졸업과 전문관리직에서 가장 높게 '일치'

<보건>

- [흡연·음주] 19세 이상 인구 중 흡연 20.8%, 음주 65.4%
- [스트레스] 가정, 직장, 학교생활 중 '직장생활' 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낌

<안전>

- [사회의안전상태] 사회가 5년 전 보다 '안전' 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은 12.0%
- [사회주된불안요인] 범죄발생(29.7%) > 국가안보(19.3%) > 경제적 위험(15.5%) 순
- [야간보행안전도] 야간 보행이 두려운 곳이 있지만, 절반 이상(52.3%)이 그냥 다님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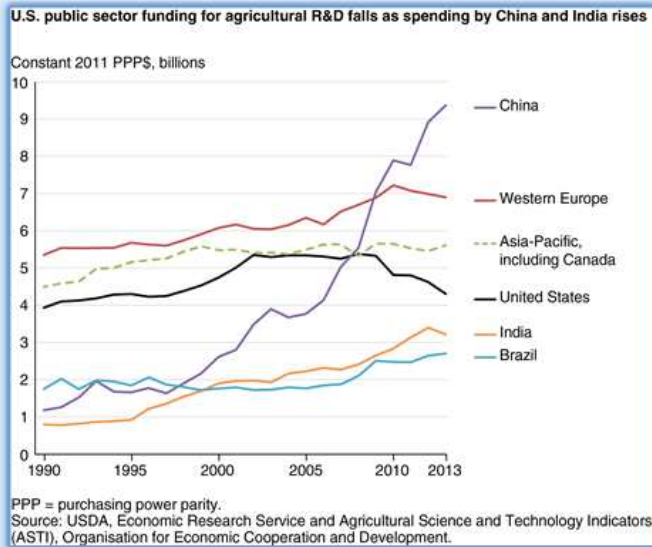
- [환경체감환경]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중 '녹지환경(41.3%)' 이 가장 좋다고 느낌
- [환경문제인식] 환경 문제 중 '황사, 미세먼지 유입(79.4%)' 에 대한 불안이 가장 커

현안분석 농업 부문 R&D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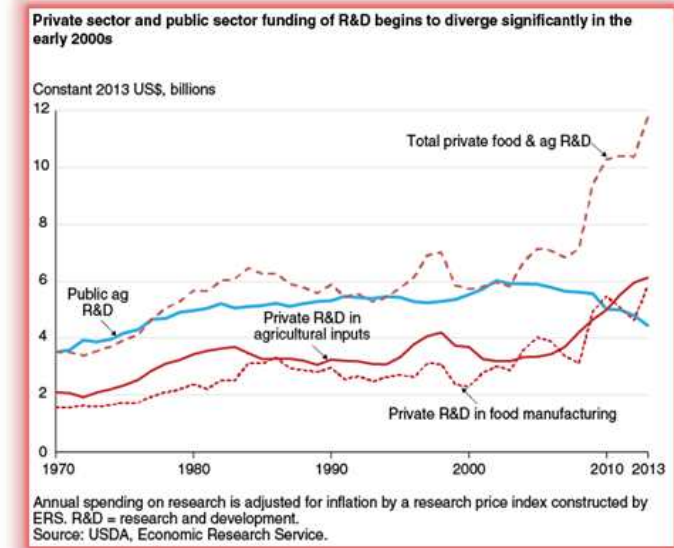
※ 미국 농무부(USDA) 자료를 근거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주요 국가 농업 R&D 공공 부문 투자 추이

- [현황] 주요 국가 농업 R&D 공공 부문 투자는 미국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임.
 - 중국과 인도가 공공 부문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 공공 부문 투자 규모는 2008년부터 미국을 추월하였음.



- [미국] 농업 투입재 및 식품 R&D 공공 부문 투자가 감소하는 반면, 민간 부문 투자는 증가하고 있음.
 - (공공) 2003년 60억 달러에서 2013년 45억 달러로 감소, 투입재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음.
 - (민간) 2003년 60억 달러에서 2013년 118억 달러로 증가, 투입재 및 식품 투자 비중이 비슷함.



□ 농업 R&D 공공 부문 투자 필요성과 효과

- [동향] 미국 농무부(USDA)는 농업 부문 R&D에서 민간 참여가 늘어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 확대) 종자 등에도 지적재산권이 적용되면서 종자회사는 비교배종(non-hybrid)을 개발해 수익을 올릴 유인이 생겼음.
 - (“신기술(the New Biology)”) 유전자재조합기술(GM) 등 신기술이 개발되면서 농업 부문 R&D 잠재 가치가 크게 늘어났음.
 - (시장 확대) 소득과 인구가 늘어나고 무역장벽이 낮아지면서 종자, 비료, 약제 등 투입재 수출 기회가 크게 늘어났음.
- [효과] 다수 연구에서 농업 부문 R&D 공공 투자 예산 대비 ‘사회적’ 수익률*을 20-60%로 추정하였음. 다른 부문에 비해 효과성이 높아 지속적인 공공 부문 투자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 ‘사회적’수익은 생산자가 얻는 경제적 편익, 소비자 편익(낮은 가격에 식품 구입), 사회적 편익(환경 질 개선, 식품안전성 향상 등)을 모두 포함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